

GDP 10년간 6% 증가... 양보 폭 커 비준 진통

■ 의미와 전망, 문제점

무역 흑자 10년간 연평균 4억달러 늘어 협정문 보완... 한-EU FTA 악영향 우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타결은 양국 간 경제관계를 진일보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익의 균형이 다소 흔들리면서 미 의회의 비준 전망은 밝아진 반면 우리 국회 통과가 더 어려워지는 반작용이 예상돼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불가피했지만 서명한 협정문을 보완해 되기도

전에 추가협상을 통해 사실상 협정문을 수정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더 큰 이익 위한 선택, FTA 강국 위상 다진다=이번 추가협상으로 다소 효과가 달라질 수 있었지만 2007년 당시 11개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공동분석에 따르면 이번 FTA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

(GDP)을 6.0% 증가시킬 것으로 평가됐다. 발효 후 10년간 연평균 0.6% 증가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교역 증가에 따라 5만7000명이지만 10년 기간으로 보면 연평균 3만4000명씩 34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게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다.

산업별로는 농업 취업자는 1만명 주는 반면 제조업은 7만9000명 증가이며 서비스업이 26만7000명으로 상대적으로 수혜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 무역수지는 수출이 수입 증가폭보다 크면서 10년간 연평균 4억6000만달러, 대(對)세계 무역수지는 20억달러의 흑자폭이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10년간 연평균 23억~32억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에 유입될 것으로 본 것이다.

한미 FTA까지 효력을 갖게 되면 우리나라의 교역 중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5% 이상으로 높아진다. 2008년 교역의 기준으로 미국의 비중이 9.9%, 인도 1.8%, EU 11.5%이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협정 발효는 우리나라가 FTA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지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나아가 FTA를 통한 경제동맹이 한미 군사안보동맹의 결속력을 높이는 효과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서 진통 우려, 2012년 발효 전망 우세=커다란 경제효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남은 과정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 측은 그동안 염원했던 자동차 분야에서 추가 이익을 쟁긴 반면 우리 측은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철폐 시기를 2년 늦추고 복제의약품 분야에서 시간을 벌었지만 균형이 흔들렸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추가협상의 시작 자체가 미국측이 기존 FTA 내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수정과 보완을 요구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국은 수세적, 방어적인 입장에서 협상에 임해야 했던 한계가 있었던 탓이다. 이런 평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접한 양국의 반응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미국은 대대적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우리 측에서는 '굴욕 협상'이라는 야권의 반발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의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양국 의회가 서두르면 한미 FTA 비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칠 수도 있지만 국내 야권의 반발 등을 고려할 경우 2012년은 돼야 발효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번 추가협상의 또 이미 서명한 협정문을 보완하는 선례를 남겨 향후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는데 있어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연립뉴스

협정문 수정않고 서한 교환 내년 상반기까지 비준 가능

■ 합의문 성격과 비준절차

한국과 미국은 3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합의문을 기존 협정문의 내용을 고치는 대신 서한 형식으로 작성, 교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안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초까지 합의문에 서명해 내년 초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존 협정문 손 안대고 '서한'으로 작성=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2007년 6월에 이미 서명한 한미 FTA 협정문은 그대로 두고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구속력 있는 약속을 담은 서한을 교환(Exchange of letters)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대표가 이번 추가협상에서 서명한 문서는 합의 사항의 요지만 정리한 '합의 요지'로 2페이지 분량이다. 합의 요지는 각 이슈에 대한 양측 간 합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추후 구체적인 문안 작업을 거친다. 이어 양측은 합의된 문서에 대해 내년 초에 서명할 계획으로 문서 형식은 구속력 있는 약속 해결절차의 대상이 담긴 서한형태로 하기로 합의했다.

연립뉴스

◇내년 초 국회 비준동의 절차 착수=정부는 이날 안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국내 절차를 끝내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합의문에 서명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 초부터 미국에서도 의회 비준동의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비준절차는 한미 양국에 차이가 있다. 한국은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에게 이를 송부하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서명, 비준을 마치게 된다. 미국은 FTA 이행법률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 본회의도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법률안이 전달되며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돼 비준절차를 마치게 된다.

양국 모두 의회 비준동의 절차를 마치면 상대국에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하게 되며 이날로부터 60일 후에 혹은 양국이 따로 합의한 날에 FTA가 발효된다.

김종훈 본부장은 "협상하는 과정에서 2012년 1월1일 발효를(임의) 두고 많이 논의한 것은 사실로 그때까지 미국도 필요한 절차를 다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미국의 인식이었다"며 "다만 그때 꼭 발효시키자는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 실무 합의문에 대해 공식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발효 4년후 자동차 관세 동시철폐 돼지고기 관세철폐 시기 2년 연장

■ 한미 합의 요지

한미 양국은 지난 3일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자동차 관세철폐일정 조정, 자동차에 한정된 셰이프가드 도입, 돼지고기 관세철폐 연장, 의약품 허가·특허 의무 이행 3년 유예, 기업내 전근비자 유호기간 연장 등에 합의했다. 다음은 추가협상 합의의 요지.

자동차 분야

▲관세 분야=승용차는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양국이 협정 발효 후 4년 후 5년째 해에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후 4년간 유지한 후 철폐(2012년 1월1일 협정 발효 전제시 2016년 1월1일)하고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한 후 철폐한다.

전기자동차는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한국(4%)과 미국(2.5%)이 모두 4년간 균등 철폐한다.

화물자동차는 미국은 당초 한미 FTA 일정대로 9년간 관세(25%)를 철폐하되 발효 7년 경과후부터 2년간 균등 철폐한다.

▲셰이프가드=한미 FTA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 셰이프가드 외에 한 EU FTA 셰이프가드의 6개 절차적 요소를 반영한 자동차에 국한된 상호주의의 셰이프가드를 도입키로했다. 6개 요소는 △관세철폐후 10년간 적용 가능 △발효기간은 최대 4년 △발효 후 미제한 △점진적 자유화의무 미 규정 △잠정조치 절차요건 간소화 △2년간 보복금지 등이다. 다만 미국이 요구한 '심각한 피해'(serious damage) 발효요건은 삭제했다.

한국 요구사항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간 연장=당초 한미 FTA에서 2014년 1월1일에 관세를 철폐하도록 됐던 냉동기타 돼지고기 품목(복살, 갈비살 등)의 관세철폐 시기를 2016년 1월1일로 조정해 2년 연장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 유예=한미 FTA 협정상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의 이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협정은 시판방지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적용을 18개월 유예하도록 하고 있었다.

▲기업내 전근자 비자(L-1) 유효기간 연장=우리업체의 미국내 지사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L-1)의 유효기간을 지사 신규 창설시에는 1년에서 5년으로, 기존 지사 근무 때는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연합뉴스

■ 여야 정치권 반응

정부가 5일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한나라당은 한국과 미국의 '윈-윈(win-win) 협상'으로 긍정 평가하며 국회 비준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운 반면 야권은 '굴욕협상'으로 맹비난하며 전면적인 비준 반대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예산에 이어 한미 FTA 비준을 놓고도 여야간 충돌국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한미FTA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된 협상'이라는 총평을 내렸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자동차 부품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부품 관세 즉각 철폐가 가져올 실익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한미 FTA 타결 자체에서 오는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며 "(협상은) 잘됐다"고 긍정

"윈-윈 협상... 비준 서둘러야" "밀실 퍼주기... 국민 반대운동"

정 평가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하루빨리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은 이번 협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로 조성된 '안보정국'에서 정부가 자동차 분야 등에서 미국 측에 지나치게 양보를 했으며 맹공을 퍼부었다.

순희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우리가 양보한 것이 3조원에 해당하고, 우리가 양보받았다는 것

이 3천억원이 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참 걱정"이라며 "이제 본격적으로 전면적 재협상 요구를 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FTA 협상타결 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분야 퍼주기 협상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국회 비준을 거부하고 국민 반대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시기적으로 불리한 시점에 속전속결의 밀실협상으로 국익 확보에 소홀히 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린 협상"이라며 "비준을 반대할 것"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ju.co.kr

Life라는 단어에 if가 들어가 있듯
인생은 알 수 없는 만약으로 가득하죠

만약, 인생에 위기가 닥친다면?
만약,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겪는다면?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전세계 7천만 고객의 선택 142년의 노하우
MetLife 금융그룹이 있으니깐요.

만약을 위한 든든한 약속
MetLife
메트라이프생명

©2010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2010 Peanuts
www.metlife.co.kr 고객센터: 1588-9600